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쟁 분석

주 효 가*·김 상 규**

요약

북핵 문제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가 직면한 난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다. 그 원인에 관한 중국학계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내용은 미중 협력 실패론, 미국 책임론, 북한 책임론, 중국 책임론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제한적 지지론, 북한 우선론, 북한 단교론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데올로기적 중국 국가이익, 국제체제 일원으로써의 중국, 더욱 거세지는 미중 간 안보경쟁 구도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학계, 북핵 문제, 학계 논쟁

* 중국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학원 박사연구생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I. 서론

1945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며 핵의 시대가 열렸고 뒤이어 히로시마에 투하되며 전쟁의 종식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는 물론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 억지와 위협이라는 평화와 안보의 가장 큰 화두로 남아있다. 그 중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북한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차례의 핵 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초보적인 핵 공격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지역은 강대국들의 국가전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위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중국의 국가 이익은 물론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지역안정, 핵확산금지 기제의 유지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한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원인인 사드 문제의 출발점 역시 북핵 문제이며 동북아에 감도는 군사적 긴장감 역시 이것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3불(不戰, 不核, 不亂)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여부를 떠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의지는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북핵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물론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관해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지도자나 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 속에 자유로운 학술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다른 국제문제 사안에 비해 북한 정보를 훨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자존심 강한 북한이 중국에게 양국관계를 비공개적으로 다뤄 주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상진 2008).

하지만 북핵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관련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학술 검색 사이트인 CNKI(中國知網: 중국지망)¹⁾을 검색해본 결과 북한 핵 문제가 발생한 1990년대 초부터 말까지 총 20여건이 안되던 관련 연구 수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연평균 146건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는 그 관심도와 중요성을 방증한다. 현재 중국의 다양한 싱크탱크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같은 정부 산하조직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정책 건의가 이루어지며, 일부 영향력 있는 학자군은 자신의 학술적 의견으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김상규 2015). 더 나아가 국가 전략의 기지(基地)로 지정되어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역할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계의 논쟁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1)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1999년 6월 설립하여 중국 학술·교육·출판·도서 정보계 등 사회 각 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원문 정보량이 세계 최대 규모인 디지털도서관이다.

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동아시아에서 치열해지는 미중 간 안보경쟁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학자들의 논쟁은 중국의 국가이익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학자들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주로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인 서구학자들의 이론과 해법, 특히 미국학자들의 인식과 해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다양한 해법의 수용과 논의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학자들의 인식과 해법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학자들의 논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내부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방법

북핵 문제는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해당사국들의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가 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중요성만큼 국내외를 통틀어 관련 논의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학계의 주요 논의를 큰 틀에서 분류해 본다면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핵 문제의 발생과 관련한 북한 내부 동학에 관한 연구, 둘째, 북핵 문제 당사국인 한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 중 중국과 관련된 연구 형태로는 첫째, 북핵 문제

와 관련된 북중 정책과 관계 변화, 둘째,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국가전략, 셋째, 한-중 양국의 국가관계 등 동북아 국가 관계에서의 한, 미, 중, 북 4개국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핵 문제가 국제체제와 질서, 미중 양국의 전략 관계 등 주로 국제정치학 범위의 거시적 담론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 중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국내 연구 중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살펴 본 것으로는 신상진(2008)이 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대북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전제 아래 북핵 실험 전후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 도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을 엘리트에 한정해 영향력 있는 학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정부 전략과 정책 변화에 대한 함의가 강하다. 또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후계체제 전망,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인식, 북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예상 대응을 주요 심층 면담 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제위기그룹에서 발간한 아시아 보고서(국제위기그룹2009)이다. 해당 보고서는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내부의 논의에 관해 전략파와 전통파 그리고 여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학자들의 인터뷰한 내용과 여론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분류해 놓은 동향 보고서 형태에 머물러 있다. 문정인(2010) 역시 주요 중국학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핵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이 역시 여러 주제 중 한 가지였고 소수의 유관 학자의 의견만을 담아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시진핑 시기의 북중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흥규, 귀슈시엔 2016). 해당 연구는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학계의 내부 논의에 관해 분석하고 그 논의 형태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내부 논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가 시진핑의 인식과 구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어 시진핑 정부의 친한(親韓)정책과 연결되었는지, 학계의 논의와 한반도 정책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 연관성을 도출하는데 그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중국학자들의 북핵 문제에 관한 내부 논의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본고에서 활용한 주요 문헌은 중국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핵심 잡지(核心期刊)에 발표된 것을 위주로 하였고, 그 선정 기준은 학자의 학술적 위상과 문장 인용 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일부 문장들은 인터넷 주류 언론매체에 기고되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투고 문장을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II. 본론

1.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 학계 내부의 이견

중국 학계 내부에는 북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에 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있다. 바로 북한 핵 문제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학자들의 분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학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국가이익의 관

점에서 이성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미해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르지만 북한 핵 문제는 각종 요인이 결부된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이지 단순히 어느 한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의 초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관한 물음이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협력 실패론, 둘째, 미국 책임론, 셋째, 북한 책임론, 넷째, 중국 책임론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유지와 북중 관계 유지를 위한 북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둘째,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핵우산 제공도 불가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미 중국 외교의 역자산(negative equity)이기 때문에 필히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협력 실패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협력 실패에 있다고 보는 학자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미중 간 협력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자 회담의 협력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선 미중 간 협력 실패를 원인으로 보는 학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익과 정책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중 판지서(樊吉社 2014)는 북핵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력 실패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접점

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중국은 북미 사이에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를 강력한 제재와 무력 사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갈등 관계에 관해 양국 간 인식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단순한 핵 확산의 문제로 보고 있지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 상태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냉전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지역 안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은 무턱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만하지 북한 정권의 안정이 중국에게 가져다주는 국가이익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간 의견 불일치의 원인에 관해 양씨위(楊希雨 2015)는 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의 대북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으며, 또한 중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용인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리카이성(李開盛 2014)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북한이 군사력을 동원해 바로 한국에 보복을 가할 것이고, 둘째, 중국의 반대는 차치하고 군사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써 미중 양국의 동북아 전략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적인 수단을 이용함과 동시에 그 전략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이는 북한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철수를 동의하기 힘들 것이며 결국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강경 조치를 취하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거나 북한이 미국과 손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이 지닌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게 되고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북중 국경지역으로 전진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중 양국의 협력 실패는 양국 모두가 국익 실현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전략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6자회담 실패를 강조하는 학자군은 주로 6자 회담의 협력기제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다. 쑤친(朱芹 2011)은 북핵 문제는 ‘사슴사냥’과 같다고 말한다.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6개의 출구이며 6자 회담을 통한 협력만이 해당국의 이익 실현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나라라도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슴사냥은 실패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 다른 이유로 6자 회담은 징벌과 신임의 기제가 부족하여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각 이해 당사국이 합의를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 신뢰를 저버렸을 경우 누가, 어떻게, 어떤 징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 성과의 이익 분배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협력

성과에 대해 강자는 늘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고 약자는 그 이익이 적다. 이러한 상황은 늘 약자가 협력 상황에서 퇴출되거나 협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국 협력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샤오용(程曉勇 2013)은 6자회담 당사국의 국력 비대칭성에서 협력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는 우선 미국은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졌지만 중국의 요인이 이를 무력화 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주장 한다. 한국 역시 전쟁 발발 시 최대 피해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 사용을 지지할 수 없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가진 강대국의 국력의 비대칭성은 상쇄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 미국 책임론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학자군은 ‘전략적 인내’ 효과의 특징과 정책 원인을 통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쉬위(許宇 2014)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전통적인 전략 사고에 기반을 두어 갈등을 공고화했고,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책임을 회피한 기회주의적이고 단기적인 전략 노선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선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재균형 전략을 추동함으로써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게 핵무기 보유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 북핵

위기를 가속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유지한 주요한 이유에 관해 쑨루(孫茹 2013)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2.29 협의가 2개월 만에 폐기된 것은 북한의 위성 발사로 인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좌절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둘째, 미국은 자신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행위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국내 정치권에는 북한의 행위모델이 ‘도발, 회담, 협정 서명, 이득 챙기기, 재도발’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받은 국내 압박은 크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의 대미 위협이 북한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이란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핵 문제가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양루이(楊悅 2015)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형성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분석한다. 즉, 아·태 지역 정치상황의 중요한 변화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만든 외부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일부 분이지만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대 아·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태 전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첫째, 전략적 인내 정책이 동맹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밀해졌고, 둘째,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더욱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세계 비핵화 전략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오바마가 제안한 ‘핵 없는 세계’(세계 비핵화 전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할 수 없었다. 물론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행이 미국의 아·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게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金强一 2015). 하지만 중국학자들이 북핵 문제의 발생을 미국의 대내적인 상황인식과 북한에 대한 판단착오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의 대결구도가 아닌 미국 내부의 정책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북핵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학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비난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북한 책임론

북핵 문제의 주요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은 북한의 전략 행위, 외부 전략인식과 신고전주의 패러다임을 통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주평(朱鋒 2005)은 북핵 문제가 북한의 국가안보와 관계된 것으로 분석한다. 북한은 줄곧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 전략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핵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냉전 이후 강대국관계는 전면적으로 완화되었고, 이념 대결은 붕괴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의 정책은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약소국은 자국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여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구조 설립에 실패

했고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점은 북한의 외부 전략 인식 차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상위정치(high politics) 영역에서의 국가안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안보와 생존이 모두 위협받는 경우 쉽게 핵 보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1950년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북한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이 없었던 것 등이 모두 북한에게 국가안보와 생존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냉전의 종식 이후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커다란 변화는 북한이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핵 보유를 선택하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강대국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체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전략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王曉波 외 2011).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을 추동하고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현실이 북한 정권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북한 체제 수호를 위한 핵 보유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특히 부시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의 실행을 주저하지 않았다. 뒤이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시행을 하지 않았고 이는 북한에게 2차 핵실험을 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 실험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정 조건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핵 카드가 북미 관계정상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시각에서 핵은 냉전 유산의 해체, 국가 안전보장 확보, 국가발전전략 실행이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가 최우선의 가치라고 말 할 수 있다.

왕성과 링성리(王生, 凌勝利 2016)는 북핵 문제를 신 고전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국제체제와 국내정치 전반에 걸쳐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이는 냉전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안보 인식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북미간의 안보 협정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 북한은 단지 과거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국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체제의 국가관계를 통해 축적한 다양한 이익협력 기제의 추동과 실질적 관계 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가장 확실한 수단인 핵 카드를 이용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국내 요인의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과 김정은은 전적으로 군부에 의지하고 있다. 군부는 북한의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며 선군정치는 지금까지 북한 체제를 지속시켜 온 강력한 정치수단이다. 비대칭의 재래식 군사력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수단을 압도하는 핵 정책이야말로 북한 선군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결국 북한 책임론의 핵심은 북한 핵 정책의 내부적 요인인 북한의 정권 수호와 국가안보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북한이 처한 외부적 환경인 한반도의 안보상황, 주변 강대국의 태도, 국제사회의 태도가 모두 북한의 안보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 북한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북한 내부 정치의 주도적인 지위를 갖는 김정은 정권과 군부는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수호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중국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가

장 큰 이유는 중국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의 모호한 정책 때문에 북한이 몇 번이고 핵 실험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관련 국가들을 전쟁의 위협 상황에 빠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하고, UN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과 정권교체에는 반대하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받는 손실 역시 북한의 그릇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중국의 정치이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지도자의 판단 착오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 중국의 위선적인 홍색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정부가 안정적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홍색중국’의 이념을 주창해왔고 이러한 이념의 지도아래 북중 관계는 동지와 형제라는 의식으로 포장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상 속의 관계는 중국이 추구하는 정상적인 국가이익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의 진실 된 역사마저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북중 간에 발생한 그 어떤 국익의 갈등도 봉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것이다(趙楚 2016).

2. 중국이 북중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

북핵 문제 처리를 둘러싼 중국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도 시간이 지나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북핵 문제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분류해보면 크게 제한적 지원, 안전 보장, 관계 단절의 세 측면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지원을 주장하는 학자군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위기의 상황에 중국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안전 보장을 주장하는 학자군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한의 안전을 담보로 하여 중국이 유연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 관점의 의견이 있지만 최근의 정세 변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받으며 학계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1) 제한적 지지론

제한적 지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 외교에 무거운 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험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미·일과 가까워지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 시하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마지노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중 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투오생(張沱生 2013)은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이 최우선이며 가능한 한 빨리 양국이 특수국가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안의 옳고 그름과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제정하고 중국이 도울 부분은 돕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문제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책임대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胡波 2016)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마지노선을 분명히 정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북한은 <중중우호조약> 세칙에 관한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중 우호관계는 반드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제한하고 군사동맹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북한의 민생 개선과 안보에 대한 합리적 요구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 문제로 인해 중국이 연루된다면 중국은 한 발 물러나 북한에 대한 일방 제재가 아닌 UN제재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인홍(時殷弘 2009) 역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때는 북한의 전략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중국의 원조와 관용만으로는 북한의 대중 우호적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은 대북원조에 단호하고 합리적인 정치적 조건을 내걸어 북한이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제정하여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대북관계와 정책에 있어서 융통성을 특히 강조한다. 북한이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국력 쇠퇴로 인해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 전략이익 관점에서 적절한 북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회복하고 전략적 여

지를 남겨 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그러면서도 UN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을 지지하고 북한이 중국의 이익과 존엄을 침해한 것에 대해 엄격히 징벌함으로써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재 집행에는 융통성을 발휘해 북중 사이의 ‘무해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한다.

팡쑹잉(龐中英 2009)은 대북 교섭에 있어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를 잘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관계를 이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한·미·일과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책 실패가 초래할 북한 정권의 붕괴, 핵무기 관리 부실로 인한 핵 방사능 사고, 군사적 충돌로 초래될 통일 상황 등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사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제한적 지지론을 주장하는 학자군은 북한이 지닌 전략적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북한에게 적절한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여 북한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북한 우선론

북한 우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핵심 관점은 북한은 중국의 동맹이며 중요한 전략적 완충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대북제재를 도울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북한이 안보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염학통(閔學通)이다. 그는 북한은 중국을 위해서 전략적 완충을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적 완충지대에 대해 양원씨양(梁雲祥 2016)은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 지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정치적 전략 완충지대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전략완충지대이다. 정치적 전략 완충지대는 북한과 중국이 같은 이데올로기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치렀고 <중조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를 좌시하거나 묵시한다면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가한 ‘항미원조’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국가 이념과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완충지대로써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완충지대의 효과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지리적 거리의 유효성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을 지정학적 동맹국가로 삼아 중국의 국가안보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鄧聿文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원조를 통해 이런 전략적 완충 효과를 ‘구매’하여 북한이 미국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우선파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핵심인 북한의 전략적 완충 국가로서 역할은 결국 북중 국경지대에 중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의 진입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것은 미중 양국의 체제와 구조적인 이유로 군사대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옌쉐통은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다면 중국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중국을 적으

로 삼지 않는 북한이나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북한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의 중국 위협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제재 경험으로 보아 대북 제재는 정치적 바람을 표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북핵 문제의 정책 목표를 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 핵 보호 우산을 제공하고,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받아들이며, 셋째,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서로 상충한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은 있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능력은 없다.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조건아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閻學通 2009, 2016).

리툰치우(李敦球 2014)는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첫째, 북한의 우선순위는 체제 유지이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 아닌 제3의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할 유일한 통로가 현재로써는 중국뿐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인 봉쇄와 압박으로 인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생사를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중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미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북한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3) 북한 단교론

대표적인 학자는 추수룡(楚樹龍 2009)이다. 우선 그는 북한의 행위와, 사유,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핵실험은 극단적인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과 중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한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북한이 나쁜 짓을 할 틈을 주어 위기 상황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는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며 중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에 외교적 고립을 시행하고 심지어 대북 원조를 중단해 서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벌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할 군사적 충돌에 대한 준비를 포함해 북한이 중국을 겨냥하여 일으킬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양진평(楊俊鋒 2014)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잠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을 하루라도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미 붕괴되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부패와 거짓으로 점철된 그들의 정치적 이념의 구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정치·경제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포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안정적인 지위와 대만 문제의 해결 등 중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鄧聿文 2013).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와 지식인은 극히 소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처럼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국제 사회의 압박은 물론 이로 인한 중국 지도부와 국내 여론의 인식 악화가 중국의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논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국가이다. 이러한 중국의 핵심 목표는 모두 경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개혁과 변화는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그 중에서도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시스템과 일체화됨으로써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국제체제에 대한 인식과 자국의 이익에 대한 정의 역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국가 역량이 증가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양국 간의 안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한 상황이 되었다.

북핵 문제는 미중 양국이 안보관련 의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중국 외교가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났는가? 둘째, 부상하는 중국은 자신의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셋째, 미중 안보 갈등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이다. 즉,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의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며 국제사회에서 양국 간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1) 국가이익이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중국 외교

중국은 개혁개방의 선포와 함께 외교정책 역시 조정하였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이익으로 외교 정책의 지도 사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관성은 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중국 대중 역시 피로 맺어진 북중 우호관계는 깰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역사 전문가인 셴쯔화(沈志華 2013)는 북중 관계는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북한은 양국의 갈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말한다. 북중 관계가 이런 패턴을 갖게 된 것은 북중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관계가 아니라 공산주의 진영 내의 일종의 형제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대중은 물론 중국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북중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만들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북중 관계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분석을 통해 기존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며 북중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학계의 문제제기와 논의가 중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 지난 5년간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호하지 않았다. 핵 확산 금지 기제를 훼손시킨 북한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

다. 비록 소극적 동의이긴 하지만 유엔의 대북 비난에 동조하고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는데 동참한 것이다. 물론 외부 세계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결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 행동에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인 행보는 분명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학계 내부의 연구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북중 관계가 더 이상 냉전시대의 이념과 전략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목표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李南周 2005). 이 같은 학계의 변화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학계의 변화와는 별개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 역량이 중국의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또 북핵 문제로 인해 한, 미, 일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의 가장 핵심적 딜레마이다. 중국이 처한 이러한 딜레마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통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 유지의 필요성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전략적 부담’(strategic liability)의 모순적 상황을 의미하는 전략적 딜레마이다(이영학 2013). 이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 명확하고 전향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없다.

(2) 국제사회로의 적극적인 진입과 책임대국으로써의 역할

중국은 건국 이후 냉전 체제와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유로 서구 주도의 국제체제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당시 중국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혁명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수립에만 머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朱立群·趙廣成 2008).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발전에 눈을 돌려 지금은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조약에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대국으로써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결국 국제사회의 안정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익 상관자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朱立群 2007).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이 국제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즉, 동아시아의 안보와 핵확산 금지조약 등을 무력화가 가져 올 국제사회의 안정과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치는 물론 동아시아 강대국의 입장에서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전통 동맹국과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핵 문제에는 중국의 특수한 국가이익이 존재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이익과 북핵 문제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은 UN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였는데 이는 불과 10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북핵 문제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에 더욱 더 깊이 융화되어 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국가이익관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고 새롭게 조성된 국가이익관은 중국의 전략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가 중국 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외부의 안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3)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간 구조적 모순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구조적인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현재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군사 대국화 등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국가대전략의 변화가 남중국해, 사드 문제 등 미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과 많은 갈등을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상하이 협력 기구(SCO),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一帶一路),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등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전 방위적 국가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수립해 놓은 기존의 국제 질서와 제도는 중국의 국가 이익 실현과 상충된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기 정책(Pivot to Asia)에 이어 아시아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충돌은 중국의 국력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토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동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점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미국을 위시로 한 동맹국들과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무역 방면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안보 질서의 이익 상충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안보문제 영역은 협력보다 긴장과 갈등 양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고 있지만 미중 간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 관계는 국가 이익을 위해 긴장과 협력을 반복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전략적 셈법에 의한 관계 설정인 것이다. 이를 두고 연쇄통은 ‘가짜 친구’ 관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閻學通 2010).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 미중 양국이 핵확산 방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와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써 그 전략적인 역량을 중국과의 국경선까지 확장 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존재는 미국의 전략 자원의 분배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략 차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다. 비록 첨단기술을 이용한 전쟁이 가능하여 북한의 전략적 방어역할이 점점 더 약화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적 방어의 상징성과 심리적 안위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중 군사 동맹 관계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지만 <중조우호조약>은 여전히 그 법률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결코 공개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학계 내부의 논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외교의 핵심이 점차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학계의 대다수 학자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조약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학자들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외교는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지지하던 하지 않던 학자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국제체계에 융합되어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국 역시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고 국제조약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최소한 중국이 왜 북한을 비난하는 UN 성명과 제재에 동참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 구조적 갈등 상황이 더욱 더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양국이 협력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이익과 결부된 사안에서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냉전 후 북핵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미국을 막론하고 누구도 북한 정권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국가이익은 점점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 스스로 전략적인 부담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체성과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약속이라는 제약 때문에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의 미움을 사는 행위 정도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다.

미중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전통 동맹국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길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권의 유지를 바란다.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목표에는 이 같은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 운영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기란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북핵 문제의 과정으로 보아 중국은 이미 막대한 외교 자원과 경제 자원을 소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책임감 없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야 했던 이미지 훼손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정부가 지불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다. 중국의 일반 여론은 물론 학계의 주류 관점은 북한이 중국에 큰 짐이 되는 국가로 인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의 군사적 효용성과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를 정책 목표의 우선 사항으로 삼아 필요한 때에 북한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중국은 언젠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 정책 목표에 있어 북한 정권 유지와 핵 포기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때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전략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대가로 남중국해 혹은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가능 하려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가 중국을 둘러싸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발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설령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미 양국이 중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7년 03월 11일

심 사 완 료 일: 2017년 04월 01일

게 재 확 정 일: 2017년 05월 30일

참고문헌

- 김상규. 2015.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역사와 내부 논의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36-65
- 김흥규, 귀슈씨엔. 2017.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연구동향에서 엿보인 소용돌이와 전환의 갈림길.” 『국방정책연구』 114: 45-81
- 신상진. 2004. “국내의 중국·북한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3(2): 261-281.
- 윤휘탁. 2013. “중국 (학계) 의 한반도 통일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60: 297-326.
- 이영학. 2013.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국제정치논총』 53(4): 201
- 전병곤. 2006 “중국의 북핵 문제 인식과 중북 관계의 변화.” 『중국학연구』 35 : 259-282.
- 戴旭(파이썬). 2009. “朝鲜核危机走向战争还是和平.” 『中国与世界观察』 2009(2): 135-136
- 邓聿文(평위원). 2013. “中国应该重估中朝关系.” 『ft中文网』(3월1일)
<http://www.ftchinese.com/story/001049186> (검색일: 2017.3.11.)
- 李开盛(리카이성). 2014. “朝鲜拥核战术何以奏效? -基于诺夫博弈分析.” 『当代亚太』 2014(4): 66-67
- 李南周(리난조우). 2005. “朝鲜的变化与中朝关系-从“传统友好合作关系”到“实利关系.” 『现代国际关系』 2005(9): 53-58

- 刘毅(리이). 2016. “当前中国周边外交重大问题的战略应对”.『领导文萃』 2016(9): 9-21
- 沈志华(선즈화). 2013a. “中朝联军指挥权归属之争.”『新浪历史』(4월 22 일). <http://history.sina.com.cn/his/zt/2013-04-22/174128893.shtml> (검색일: 2017.3.12.)
- _____. 2013b. “同床异梦：朝鲜战争期间的中朝同盟关系.”『新浪历史』(7월 25일). <http://history.sina.com.cn/his/zt/2013-07-25/110350756.shtml>
- _____. 2013c. “1950年代中朝关系惊天内幕.”『新浪历史』(9월 3일). <http://history.sina.com.cn/his/zt/2013-09-03/102952867.shtml>(검색 일: 2017.3.13.)
- 时殷弘(스인홍). 2009. “朝核试验与朝鲜半岛未来.”『中国与世界观察』 2009(2): 125-130
- 许宇(쉬위)·黄风志(왕펑즈). 2014. “战略忍耐”的困境——奥巴马政府对朝政策剖析.”『东北亚论坛』 2014(3): 110
- 孙茹(손루). 2013. “奥巴马政府对朝“战略忍耐”与朝核问题.”『现代国际关系』 2013(1): 23-27
- 杨悦(양루이). 2015. “奥巴马政府对朝“战略忍耐”政策探析.”『外交评论』 2013(4): 148-155
- 杨俊锋(양쥔펑). 2014. “中国应放弃“负资产”朝鲜.”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7090>
- 杨云祥(양원씨양). 2016. “中国对朝鲜“战略缓冲区”的矛盾与困境.” http://pit.ifeng.com/a/20160628/49258196_0.shtml(검색일: 2017.3.12.)
- 杨希雨(양씨위). 2015. “中美关系中的朝核问题.”『中美关系中的超和问题』 2015(3): 23-30.
- 王生(왕성)·凌胜利(링성리). 2016. “朝核问题的解决的“双轨制”新思路探讨.”『东北亚论坛』 2016(3): 19-20
- 王晓波(왕시아오보)·宋金泉(송진취엔). 011. 朝核问题：内在逻辑和中国

- 外交政策选择.”『国际观察』2011(3):50-54
- 阎学通(옌쉐통). 2009. “中国在朝核问题上的两难境地.”『中国与世界观察』2009(2): 99-107
- _____. 2010. “对中美关系不稳定性的分析.”『世界经济与政治』2010(12): 4-30
- _____. 2016. “政治领导与大国崛起安全.”『国际安全研究』2016(4): 18-19
- 易化(이화). 2016. “朝核问题的由来和影响.”『国际安全研究』2013(5): 59
- 金强一(전치앙이). (2015). “构建东北亚和平安全机制该怎样协助中美战略利益.”『世界知识』2015(12).
- 赵楚(짜오추). 2016. “朝鲜核爆标志中朝核政策失败.”
<https://club.1688.com/article/31048337.htm> (검색일: 2017.3.13.)
- 张琰瑰(장리옌구이). 2013. “维护朝鲜半岛无核化处于成败关键期.”『东北亚论坛』2013(3).
- 张沱生(장투오성). 2013. “朝核问题与中国的政策.”『国际安全研究』2013(5): 59
- 朱锋(주펑). 2005. “六方会谈：“朝核”背后的若干问题.”『和平与发展』2015(2): 44-45
- 朱立群(주리쑤). 2007. “观念改变，领导能力与中国外交的变化.”『国际政治研究』2007(1): 9-20
- 朱立群(주리쑤)·赵广成(짜오광청). 2008. “中国国际观念的变化与巩固：动力与趋势.”『外交评论』2008(2): 19
- 朱芹(주친). 2011. “六方会谈：决策树模型视角下的猎鹿困境.”『太平洋学报』2011(4): 61
- 程晓勇(청시아오용). 2013. “弱国何以在不对称博弈中力量陪增-基于朝核问题六方会谈的分析.”『当代亚太』2013(6): 62-65
- 楚树龙(추수룽)·荣子(룽위). 2009. “朝鲜问题需要新思维新政策.”『中国与世界观察』2009(2): 109-115
- 樊吉社(판지서). 2014. “朝核问题与中美战略共识.”『美国研究』2014(2):

14-16

庞中英(판중잉). 2009.“外交手段能否解决朝核问题”.『中国与世界观察』

2009(2): 117-124

胡波(후비). 2016. “困境凸显，中国对朝鲜半岛政策需要清晰亮牌.”『凤凰网』(8월 29일)

<http://www.build.net/ifeng-news/407797.html?from=account>

商务部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际原子能机构联合公告2013年59号 “关于公布禁止向朝鲜出口的两用物项和技术清单的公告.”2013.9.28.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693395.htm> (검색일: 2017.3.11.)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November 2.

Abstract

Debate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Chinese Perspective

Zhou, Xiao Jia

Institut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Tsinghua University

Kim, Sang Kyou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yang Universit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major challenge to Chinese foreign policy makers in North-East Asia. It concerns Chinese vital strategic interest. How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ensure the survival the North Korea regime is a big problem facing Chinese Foreign policy makers. As for the reason concerning difficultie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Chinese scholars have different viewpoints. Generally there are four kinds of reasons: first, the failure of cooperation, second, North Korea responsibility, third, American responsibility, finally, Chinese responsibility. As for the Chines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re are three kinds: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 for limited support,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d for providing security, one group of scholars advocate for a sever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o understanding Chinese Scholars Debate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scholars should look at it in three dimensions: first, Chinese national interest without ideology, Integration of China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severe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Keywords: Chinese academia, North Korea Nuclear issue, Argument,
Debate